

정부, 69개 공공기관 인력 13% 감축 계획 발표

‘노조 반발’ 협준한 산 넘을 수 있을까

기획재정부가 21일 69개 공공기관에서 일제히 인력 10% 이상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4차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조의 반대가 여전한 데다 희망 퇴직도 수월하게 진행되기 어려워 정부의 뜻대로 인력 감축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감축분의 절반 신규 채용... 인턴제 활용 “비정규직만 더 늘어난다” 반발 살 수도

4천500명, 수자원공사 등 업무량이 줄어든 기능은 없애서 5천900명, 조폐공사 등의 기관들에서는 전산화에 따른 기능 조정으로 9천명을 각각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인력 감축분의 절반을 신규 채용하고 나머지는 청년 인턴제를 통해 고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결국은 정규직은 자리를 잃고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산매각**=정부는 자산 매각에 따른 효과를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용산역세권 부지 매각 등 예전부터 진행돼왔던 사업들을 제외하면 신규로 발생하는 효과는 별로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추산으

로는 자산매각에 따른 수입이 8조5천억원, 정원 축소 등 예산절감에 따른 효과가 1조7천억원 이상이다. 자산 매각 부문에선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부지 매각(7조6천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스공사의 직원 사택, 증권예탁결제원의 골프장 회원권, 농촌공사의 올해 임금인상분 40억원, 자산관리공사의 퇴직금 지급의 부상휴가 등을 없애는 것도 예산절감에 반영된다. 성과관리 등 운영시스템도 바꾼다. 성과에 따라 봉급이 결정되도록 연봉제를 전 기관에 도입한다. 현재 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이 없는 기관은 69개 기관 중 증권예탁결제원이 유일하다.

정부는 간부직 비효율 등을 포함하는

■ 주요 공공기관 정원조정안 (단위:명,%)

기관	정원	감축	감축률
한국철도공사	32,092	5,115	15.9
한국전력	21,734	2,420	11.1
한국수력원자력	8,127	1,067	13.1
중소기업은행	7,392	740	10.0
한국농촌공사	5,912	844	14.3
한국도로공사	4,559	507	11.1
한전KPS	4,514	460	10.2
한국수자원공사	4,249	475	11.2
대한지적공사	3,988	402	10.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333	383	11.5
강원랜드	3,227	436	13.5
한국전기안전공사	2,876	289	10.0
가스공사	2,848	305	10.7
대한석탄공사	2,391	384	16.1
한국산업은행	2,370	237	10.0
한국조폐공사	2,006	222	11.1

공공기관 조직 효율화 기준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200여개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내년 1~2월 중에 2단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반민생·반민주 규탄대회

21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맹 등의 주최로 서울 명동에서 열린 반민생·반민주 규탄대회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 ‘오바마 취임식 참석’ 성사되나

국회측 ‘푸대접’ 우려 난색... 냉랭한 여야 관계도 변수

연말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초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등이 국회 대표 자격으로 내년 1월20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전후로 대미(對美) 의원의료를 펼치기 위해 미국을 찾는다 는 것이다.

정치권과 국회 관계자는 21일 “여야 원내대표의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참석 문제를 놓고 정치권과 국회 차원의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의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참석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으로 워싱턴에 40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하루 호텔 숙박비가 3천달러를 웃돌고 그마저도 숙소잡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인 데다, 국회 대표가 자칫 ‘푸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회측이 난색을 표명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취임식을 피해 1월중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 방안이 현재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비록 취임식에

는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오바마 정부에 포진할 각료, 백악관 참모진, 한·미관계에 정통한 의회 관계자 등을 폭넓게 만나게 오히려 실속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 역시 여야관계의 급랭으로 성사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는 분위기다.

또한 ‘취임식 참석’이라는 최소한의 명분도 없이 미국을 방문했다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인 데다, 국회 대표가 자칫 ‘푸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회측이 난색을 표명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취임식을 피해 1월중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 방안이 현재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비록 취임식에

“고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고승덕 의원 개정안 발의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금주 내 전 국민이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도록 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0년 3월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추가,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국한된 무상교육을 확대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무상

교육 대상에서 제외했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승리 21’의 권영길 후보가 고등학교 등록금 폐지를 주장하는 등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종종 제안됐지만 실제 법안발의로 이어진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 고 의원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특별교부금은 교과부 간부 쌈짓돈?

교육과학기술부와 옛 교육인적자원부 고위직들이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22차례에 걸쳐 특별교부금 13억원을 학교방문 격려금 용도로 부당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교과부 특별교부금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교과부 간부들의 모교, 자녀학교 특별교부금 지원 논란과 관련, 시민단체가 지난 5월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교과부 장관에게 특별교부금 부당지원과 관련한 재발방지와 관련자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과부와 옛 교육부 장·차관, 실·국장 등 고위직들은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 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도록 돼있는 특별교부금을 학교방문 격려금 용도로 부당 지원했다. 2004년~2008년 5월 부당지원된 교부금은 모두 122차례 13억원으로, 이중 11차례는 교부증서를 통해 8천500만원이 지원됐다. 특히 장·차관, 실·국장의 모교나 자녀학교에는 20차례에 걸쳐 1억8천500만원(교부증서 9차례 5천500만원)이 부당하게 교부됐다.

122회 걸쳐 13억원 부당 지원

모교·자녀 학교에 ‘제돈 쓰듯’

이와 관련해 특별교부금을 사용한 격려금 지원 범위는 올해 5월 장·차관에서 실·국장장으로 확대됐고, 교과부 실·국장 7명은 모교(5명)와 자녀학교(2명)를 방문해 특별교부금 교부증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격려금 지원범위 확대를 제한하고, 두 차례에 걸쳐 직접 모교를 방문해 특별교부금을 전달한 책임자에 대해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도록 교과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2006~2007년 지원요건이 되지 않는 16개 특정학교 사업에 199억원의 교부금을 부당교부한 사례를 적발, 관련 국·과장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부당지원 유형과 규모는 ▲시·도교육청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11개 학교 사업에 164억원 교부 ▲지방자치단체 투자지원이 없는 2개 학교 강당 증축사업에 44억원 지원 ▲3년 이내에 특별교부금을 받아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4개 학교에 19억원 교부 등이다.

감사원은 이어 2007년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시 교육부가 지원하는 교부금) 5천668억원으로 추진한 114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20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교과부장관에게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지역교육 현안 수요, 재해대책 수요 특별교부금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당신만을 위한 가장 특별한 크리스마스
Mercedes-Benz 전차량 일제히 0% 금부 특별크리스마스

Season's Greetings
Special Gift

0% Interest rate

Mercedes-Benz